



전남지역 흑염소 도축료 기습 인상...축산 농가 반발

화순·강진 2개 업체, 1만원씩 동시에 올려...3년 새 57% ↑
농가들 "담합 의혹" vs 도축업체 "경영난에 인상 불가피"
도 "민간업체 이윤 고려 자율 책정 사안 제재 근거 없어"

전남지역 흑염소 도축업체 2곳이 도축료를 동시에 기습 인상하면서 지역 내 흑염소 농가들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흑염소 농가들은 도축료 인상으로 인해 국산 흑염소 시장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도축업체들은 경영난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9일 (사)전남흑염소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 화순군과 강진군에 있는 흑염소 도축업체 2개소가 흑염소 도축비(60kg 이하 기준)를 마리당 4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1만원(22.2%)씩 인상했다. 2개 업체는 앞서 2021년에도 도축비를 3만5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1만원(28.5%) 올린 바 있다. 최근 3년 사이 흑염소 도축비가 57.1%나 급등한 셈이다. 전남 소재 흑염소 도축시설은 이들 2개 업체 뿐이다. 전국적으로는 2곳이 소재한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충북 제천·충주시, 경남 함양군에 각 1곳 등 총 7곳이 있다. 전남 흑염소 농가들은 "사실상 독과점 지위에 있는 2개 업체가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상 시기와 인상액을 동일하게 책정한 만큼 담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도축업체들이 경영 상 어려움을 도축비 인상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전남이 전국 흑염소의 25%를 생산하는 최대 주산지인 만큼 처리 물량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농가의 입장이다. 실제 2022년 기준 전남 흑염소 농가는 1천455호로 전국 흑염소 농가(1만73호)의 14.8%를 점유하고 있다. 전남지역 사육 두수는 10만8천두로 전국(43만2천두)의 25%의 비중을 차지한다. 황기연 전남흑염소생산자협회장은 "3년 전 도축비를 인상할 때도 전남 2개 업체



쏟아지는 장맛비 광주·전남 곳곳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면서 간간이 굵은 장맛비가 내린 9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시민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비는 11일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12일부터 광주·전남에 다시 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7면 /김영근 기자

가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자 타 지역도 추장도 잇따라 도축비를 올렸다"며 "국내 흑염소 시장에서 수입산 흑염소 비중이 70%이르는 현재 도축비 인상은 국산 흑염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산 흑염소 시장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또 "도축업체들이 의견 조

울 없이 도축비 인상만을 부당하게 고집한다면 농가들도 뜻을 모아 손해를 감수하고 타 지역 도축장을 이용하는 방안 등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도축업체 측은 "다른 축산물까지 취급하는 타 지역 도축장과 달

리 전남 업체들은 흑염소만을 취급하는 전문 도축장으로 설비·인력 유지를 위한 최소 도축량을 충족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축비를 인정한 것"이라며 "사전에 농가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간 업체인 도축

장이 이윤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도축료를 책정하는 만큼 도에서 제재할 근거는 없다"며 "농가와 도축업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모두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도축비 인상 관련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광주 '홈로봇가전 활성화' 날개 달았다

산업부 '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 선정...국비 100억 확보

광주시가 홈로봇가전 지능형부품 개발 기반 구축에 날개를 달았다. 광주시는 9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산업기술기반구축혁신사업 신규 과제 '홈로봇가전 지능형 부품개발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포함 총 사업비 150억원이 투자되는 홈로봇가전 기반 구축 사업이다. 광주시의 지원을 기반으로 (재)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로봇융합연구원, 한국전자통신산업진흥회가 참여해 사업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기업 수요 중심의 시험·실증 지원 기반 구축, 기술 개발 혁신 방향 제시, 지역 산업 위기에 신속 대응 지원 등을 통해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20개소 육성 ▲2천억원 규모 생산 유발 ▲600명 이상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홈로봇가전'은 로봇과 가전제품의 특성을 모두 가지면서 가전제품에 로봇·지능화 등을 적용, 사용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가전, 주방·조리가전, 케어가전, 홈 디바이스 등 가정 내 사용되는 모든 범위의 가전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설계, 시제작)과 개발품의 ▲성능 평가 ▲사용성 평가 ▲실증 평가 ▲인증 지원 ▲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신규 기획 제품 개발, 보유 제품의 개선·개발 중인 제품 등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홈로봇가전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로봇, 가전 제조사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후방 산업인 소재·부품·인공

지능 등 소프트웨어(SW) 분야와 전방 산업인 시스템 통합·수요 분야(제조·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완제품·부품의 설계,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콘텐츠 제작·운영 등 다양한 연관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다층적 가치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 효과가 기대된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연구개발 비용 절감, 제품 신뢰도 향상 등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강 기자

尹, '채상병특검법' 또 거부권

대통령실 "수사 결과 실제적 진실·책임소재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제의 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제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말아붙인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제의(거부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김진수 기자

Today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위원장 5면
	무인점포, 안전 관리 시각지대 6면
	한국 최초 여성싱 메달 '부푸꿈' 16면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인증캠페인

상점에서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에어컨 온도 1도 ↑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
₩10,923원

영업종료 1시간 전
냉방 끄기
₩23,573원

문 닫고
냉방방하기
₩27,214원

고효율 조명
이용하기
₩75,842원

영업시간 외
조명 소등하기
₩80,346원

낮시간 자연 채광
이용하기
₩9,874원

개방형 냉방고
문 닫아 사용하기
₩161,618원

승강기
격층 운행하기
₩32,891원